

조직정비 나선 국힘, 당무감사·조강특위 투트랙 가동

이성호 당무감사위원장 임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재개

17~18일 '사고 당협' 66곳 신청

전대 일정·총선 공천 영향 촉각

국민의힘이 '조직 정비'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성호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채워 넣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당내에선 우선 당무감사와 조강특위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강특위는 오는 17~18일 '사고 당협' 66곳의 당협위원장 지원자로부터 서류 신청을 받는다.

서류 검토와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년 1월께 공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당내에서 나온다. 조강특위는 앞서 지난 9일 사고 당협 69곳 가운데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 등 3곳을 제외한 66개 지역에 대한 공모를 받기로 한 바 있다.

당무감사는 60일의 사전 고지 절차와 현지 실사 등 실무작업까지 포함하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진행될 경우, 내년 4~5월은 돼야 마무리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과 직결될 수 있다. 당초 거론되던 내년 초 전대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내년 4~5월, 또는 여름까지 전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강특위와 당무감사 활동은 전대를 넘어 내년

말 본격화할 2024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직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강특위와 당무감사에 따라 선임·교체될 당협위원장 규모도 관심사다.

조강특위가 현재 비어있는 당협 66개를 모두 채운다면,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영입 인재를 위한 '공간'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실제로 여권 핵심부를 중심으로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비해 조강특위의 당협 정비 작업에도 '지역 안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을 앞두고 '현역 몰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비윤(비윤석열)계 전·현직 의원들을 숙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한 차례 파열음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패륜 행위” 맹공

정진석 “반드시 법적 대응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다.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패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명단공개는 친야 성향의 단체인 '민들레'를 비롯해 '더탐사'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를 뛰쳐나가 활동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냐”라며 “추모를 방자한 계획된 정권전복 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명단 공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 “아마 자신들이 기획했던 것인데 여론의 비판이 크니까 명단 공개를 찬성하기도 못하고 비판하기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아닌가 짐작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여론에 따라 변한다고 지적하며 “타인의 죽음을 앞에서 이처럼 말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인의 죽음마저 계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에 별반 실효성도 없는데 과잉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당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보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완전히 국가이성을 상실한 채 자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정당을 누가 공당으로 인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나침반이 고장 난 배처럼 공당의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가 길을 잃었다”며 “방어해줄 것이 있고 절대로 동료라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 합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비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여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고 DPA,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 통신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이 이틀간의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대표를 포함한 G20 국가 협상 대표들이 정상회의의 종료 후 발표될 공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DPA가 자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반대에도 초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문구를 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언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해온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 대신 ‘전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 같은 선언문 초안을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나 관련해 러시아가 G20 내에서 더는 강력한 우방인 중국의 지지에 기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DPA는 분석했다.

한편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이날 AFP 통신에 G20 국가들이 정상회의의 종료 후 회원국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의 “G20 국가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인도주의적 고통의 근원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몇 개국이 이 선언문에 참여하지 않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힘 오늘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간담회

국민의힘이 압사 참사 이후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을 만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15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위원실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참사 발생에 따른 정부의 현장

조사와 추모공간 마련 등으로 영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한다.

이윤리 참사 당시 구호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나선 지역 상인들의 트라우마 치료 대책 마련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동희 회장 등 임원진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용산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각계각층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피해자 측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개최를 예고했던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일본과 긴장감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작품은 국민 전해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새지 않고 투명하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내가 낸 후원금은 다 어디로 갈까?
다른 경로로 새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사랑의 열매는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